긴급토론회

촛불의 의미와 시대정신의 전환 촛불의 정신, 대한민국을 바꿀 것인가?

| 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더불어민구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2016년 촛불의 시대정신과 정치의 과제 연속토론회

구분	세부내용
	주제: 촛불의 의미와 시대정신의 전환(촛불의 정신, 대한민국을 바꿀 것인가?)
	일시 및 장소: 2016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좌장: 정해구(성공회대 정외과 교수)
1회	패널: 김의겸(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갑수(시인, 문화평론가)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주제: 촛불의 의미와 정치의 과제(촛불의 명령, 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2016년 12월 08일(목) 오전 10시/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
	좌장: 이남주(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2회	패널: 허석재(목포대 연구교수) 김남근(변호사/민변 부회장) 이관후(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진성준(민주연구원 부원장)

프로그램(PROGRAM)

개회식	10:00~10:20	사회: 진성준 부원장(민주연구원)
국민의례/내빈소개		
[축 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사말]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토론	10:20 ~ 11:20	좌장: 정해구(성공회대 정외과 교수)

주제: 촛불의 의미와 시대정신의 전환(촛불의 정신, 대한민국을 바꿀 것인가?)

패널: 김의겸(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갑수(시인, 문화평론가)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종합토론 <u>11:20 ~ 11: 50</u>

CONTENTS

◎ 축 사

추미애 민주연구원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대표

◎ 인사말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_ 발표문

자) ····································	• 김의겸(한겨레신문 선임기지
5	• 김갑수(시인, 문화평론가) …
의 사무국장)9	•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
17	•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추미애 민주연구원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년 겨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를 매주 새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 10.29 1차 집회 3만 명에서 시작된 촛불은 11.26 5차 집회에 190만 명을 기록하며 한 달 새 60배가 늘어났습니다. 연인원 400만 명은 `87년 6월 항쟁에 버금가는 헌정사 최대집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바람에 꺼질 것'이라던 촛불은 모진 삭풍에 횃불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 세계 주요 도시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달이 넘도록 지치지 않는,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고 단호해지는 국민들의 열정입니다. 경남 창원의 단감농사를 짓는 가족은 '역사의 현장에 있고 싶다'며 새벽녘부터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고, 경북 문경의 고등학교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정의는 글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란 점을 보여주고 싶다'며 광장에 나왔습니다. '촛불 용광로' 민심은 한겨울 광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고, 위대한 전국민적 항쟁의 불길은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190만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낡은 체제 전반에 대한 변화와, 특권 독점세력을 타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새로운 체제를 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광장이 뜨거워질수록 정치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는 매우 뜻깊습니다.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을 살펴보고, 광장의 목소리, 광장의 희망이 정치의 역할과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좌장이신 정해구 교수님, 패널로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을 비롯해, 함께 하신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6.11.30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용익입니다.

민주연구원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촛불 민심과 시대정신을 살펴보고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2회 연속 긴급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11월 30일 첫 번째 토론회는 '촛불의 정신, 대한민국을 바꿀 것인가' 주제를 다루고, 12월 8일은 '촛불의 명령,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제에 대해 토론하려고 합니다.

2016년 '촛불'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보수정권 10년의 실정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깔려 있습니다.

분노와 울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함성 속에 들어 있는 분노와 희망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지식인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촛불의 분노와 촛불의 시대정신, 촛불이 그리고 있는 새로운 나라의 비전은 내년 대선에서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구현하는 것이 새 정부의 임무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촛불의 시대정신을 모색하고 정치의 역할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토론회 좌장을 기꺼이 맡아주신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님, 그리고 발표자로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과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촛불의 시대정신과 정치의 과제 연속토론회(1회)

• 발표문 •

김의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의겸(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촛불에 복종하라

1.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세력이다"

- 광장의 촛불은 어느 날 갑자기 켜진 게 아니다. 민심은 이미 4월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앙시앙 레짐을 버렸다.
- 61년 박정희 이후 성장 전략이 생명을 다하고 새로운 체제와 질서를 요구하는 시점
-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절망과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희망이 있기에 100만 200만 촛불 켜져
- 우리 사회 보수 세력도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위기감을 느끼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취재과정에서의 협조
- 한겨레, jtbc의 보도는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것
- 현 국면은 박근혜와 최순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55년 동안 쌓인 적폐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의 문제. 루이16세와 마리 앙뜨와네트가 아니라 봉건세력.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

2. 새누리의 덫 개헌론

- 새누리 '박근혜-최순실 국정문란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 박근혜 정권의 모태로서 박근혜 실책을 바로 잡은 게 아니라 부추긴 책임
- 그런데도 '탄핵과 개헌' 들고 나와. 이는 박근혜만 꼬리자르기하고 재집권하려는 전략. 과거 80년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없는 박정희 정권, 87년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 없는 전두환 정권. 이제 2017년에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만들려는 것.

- 정치 이론 수동혁명. 안토니오 그람시가 처음 말한 개념. 혁명적 위기의 시기에 기존 지배 세력이 도전 세력의 일부 흐름과 요구를 흡수해서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
- 개헌론이 대두되면 분열될 듯 싶은 새누리 봉합. 대신 야권 분열. 박근혜의 부패와 무능은 덮히고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모든 게 빨려들어. 어쩌면 3년 뒤 총선에서 영남을 기반으로 박근혜 부활할 수도
- 과거 해방정국에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는 거짓 전선 만들어, 친일파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사라지고 친일파 부활.
- 야당 내각제 개헌론자. 신념형 vs 생계형으로 나뉘어.
- 우리 사회 공고하게 구축된 구질서 해체하는 데는 타협과 공생이 아니라 힘의 집중과 효율적 행사가 더 필요한 시점
- 과거 이민우 구상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민정당은 차기 권력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 개헌을 돌파구로 여기고 연구. 그런데 이민우 1986년 12월 24일, 연말 기자회견에서 "이민우 구상" 발표. 이민우 구상의 골자는 의원 내각제 개헌에 응할용의가 있다는 것. 1987년 5월 신민당은 박살이 나고 이민우는 정계은퇴.

3. 질서있는 진군

- 현재 유일한 권력, 국회의 야3당. 국정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국정을 이끌지 야당의 책임과 능력 보여줘야. 단순히 위기 관리 수준을 넘어, 집권 시 어떤 정책을 펼지,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 이는 현 각료들이 최소한의 기능만 하도록 감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 앙시앙 레짐을 어떻게 해체할지. 재벌, 검찰, 국정원, 언론 개혁에 대한 청사진 과감하게 주장하고 요구해야.
- 이를 위해 질서있는 진군 필요. 촛불 대중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간결하고 명료한 구호
- 촛불은 조급하지 않다. 평화롭고 잘 정돈된 대오를 유지. 장기전을 치를 태세.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겪으면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 오히려 불안에 사로잡히고 조급증에 걸린 건 정치권.

2016년 촛불의 시대정신과 정치의 과제 연속토론회(1회)

• 발표문 •

김갑수

(시인, 문화평론가)

김갑수(시인, 문화평론가)

1. 촛불집회는 축적된 사회개혁운동의 산물이 아니다.

- 전망 부재의 사회현실 앞에서 국정농단이라는 계기를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민사회의 무작위적 반응이다.
- 따라서 촛불 민심을 구체제에 대한 전면적 항거로 보는 견해는 단지 소망적 견해일 가능성이 높다.

2. 촛불의 규모와 지속성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대오까지만 유지될 것이다.

- 퇴진 시점의 장기 지연 시 1. 동정여론이 증가할 것이다. 2. 자포자기적 무관심이 확산될 것이다. 3. 분노의 증폭으로 내란적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 위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박 세력은 셋 중 어떤 항목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도출할 것이다.

3. 촛불민심의 정치적 귀결점은 내용적으로 '신3당합당' 성격의 프레임에 놓이게 될 것이다.

- 신3당 합당은 개헌추진 세력들의 향후 목표이다.
- 모든 잘못은 박근혜 탓이 아닌 '제왕적 대통령제' 탓이라고 규정하고 보수언론과 종편 전체가 분권형 대통령제, 2원 집정부제, 내각제 등등 용어는 다르나 내용은 동일한 개헌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 김무성이 선도하는 새누리 비박계(핍박받은 여당 내 야당), 박지원이 이끄는 국민의 당, 김종인 등 민주당 내 개헌파, 반기문 손학규 등 정치 낭인 등등이 총 연대하여 개헌=개혁세력 대 친문=수구세력(호헌세력)의 대립구도를 만들려할 것이다.

2016년 촛불의 시대정신과 정치의 과제 연속토론회(1회)

• 발표문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1. 2016 대통령 퇴진 정국 이전의 대한민국

지난 10월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암흑의 세상이었다. 대한민국의 통치구조 내에 존재하는 시스템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였다.

무력한 국가의 재난통제 시스템에 자식을 잃은 세월호의 유가족들은 그 자체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국가는 답이 없었다. 단식으로, 삭발로 진상규명의 절박함을 호소하던 유가족들은 보수단체들이 퍼부어 대는 종북세력, 세월호 점령군 등의 비아냥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지만 거기에도 국가는 없었다. 2년을 훨씬 넘긴 지금도 여전히 세월호는 선체인양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 때에도 고장 난 국가재난통제 시스템은 여전히 멈춰있었다. 재벌 대기업과의 연관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국가에게 국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며 국민들의 역사관을 통제하려 들었고 급기야는 이에 분노한 고교생들까지 거리로 나오게 하였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또 어떠한가? 반백년 세월을 훌쩍 넘겨 한 맺힌 삶을 살고 계신 할머니들의 가슴에 한일굴욕 합의라는 대못을 박아버린 것이다. 사측의 말도 안되는 손해배상에, 가압류에 살길이 막막했던 노동자들은 다시 또 굴뚝으로, 전광판 위로 내몰렸고, 급기야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해군기지에, 사드배치에, 수명이 다된 노후원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주권자와의 합의과정 없는 국가의 일방적 의사결정은 국토 곳곳에서 대립과 분열을 야기시켰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언론의 침묵은 국민들의 기레기라는 쓰디 쓴 질타에도 입을 열지 않았고 암흑의 대한민국을 더욱 더 숨막히게 하였다.

과정에서 진행된 4.13 총선은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가 징벌적 표심으로 작동되어 여소야대라는 소중한 결과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능감은 미미했고 정치가 근본적으로 내 삶을 바꿀수 있을 것 이라는 희망도 점점 약화되어 갔다.

2. 200만개의 촛불 등장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에서 가장 많이 불리웠던 노래의 가사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보이지 않게 어둠속 깊이 숨겨져있던 검은 권력자들이 하나둘 본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축적되었던 국민들의 분노 또한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장을 통해 매회 기록을 경신하며 표출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은 전국에서 무려 200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날이 되었다. 대한민국과 아시아는 물론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시위이다. 이제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그 자체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학습장'이라고 참여자 저마다 이야기한다. 외신 또한 한결같이 한국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놀라움을 넘어 경이로움을 표하고 있다.

3. 광화문 광장과 전국에서 밝힌 200만 촛불은 무엇을 말하는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되었던 촛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광장에 모인 분노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광장에 모인 분노의 목소리를 사회변혁의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충실해야 한다. 현재 광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구호는 "박근혜 퇴진"이다. "정권퇴진"이라는 구호는 지난 운동의 역사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지만 상징적인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권 퇴진을 위한 진지하고 절박한 구호는 아마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통틀어 처음이 아닐까 싶다. 그 자체로 위대하다.

하지만 "박근혜퇴진" 이라는 상징적인 구호에 담긴 다중의 의미에 대한 세심한 분석 또한 구호 자체의 의미 만큼이나 중요하다. 그것은 선출된 권력,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권력이 자행한 배신에 대한 자기반성적 분노이자, 국가가 작동하는 시스템의 근원에 존재하는 어이없는 실체에 대한 당황스런 분노이다. 이 어이없는 상황의 잔해물로 살을 찌운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이고,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상황을 방조한 검찰에 대한 분노이다. 그 틈새에서 국민들을 무난히 착취해온 재벌대기업과 권력의 대변인을 자처한 언론에 대한 분노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부패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여 여소야대의 효능감을 전혀 주지 못한 무능한 야당에 대한 분노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촛불의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자기성찰적 분노는 반드시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집단적 표현이 지난 26일 집회의 1분 소등이 아닐까 싶다. 8시를 기해 촛불을 비롯한 모든 불빛을 일제히 소등함은, 지금은 어둡지만 우리 하나하나의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몰아 빛으로 더욱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간다는 시민들의 외침으로 해석되어도 좋을 듯 하다.

4. 자발적 주체로서의 시민의 등장

2008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깃발을 내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2016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스스로 깃발을 들고 온다. 깃발을 내리라는 조직된 대오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집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주체로서 "민주묘총", "고산병연구회" 등과 같은 패러디 및 풍자를 가미한 깃발을 들고 참여한다. 각자 개성을 살린 익살스러운 언어유희로 어둠의 권력을 조롱하고 국정농단 현황들을 풍자하며 패러디하는 유쾌한 시위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정권을 향한 약자들의 분노를 유감없이 배출해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발적 주체성은 집회의 참여와 진행단계 뿐만 아니라 마무리단계까지 지속된다. 주최 측 여부를 불문하고 청소 기타 마무리까지 함께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이 집회라는 집단적 행동양식을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우연적 현상이 아니다. 평화적 시위라는 속성에 개성 넘치는 재치를 가미해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내는 의도된 퍼포먼스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냈고 이는 보다 많은 대중들의 참여를 다시금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여기에 각종 SNS의 기능, 특히 개인의 현장 중계가 용이해진 상황이 결합하여 집회에 참여하는, 참여하지 않는 현장을 공유하고 정서적 동질감을 확인하며 확장성을 갖는다. 특히, 혼자 시위에 참여하는 일명 '혼참러'들 또한 이러한 SNS의 기능과 함께 광장에서는 이미 혼자가 아니며 그 수 또한 주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슈 무한 확장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이미 광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5. 분노한 다음날이 더 중요하다

지난 7월 한 특강에서 유고슬라비아의 비판이론가 슬라보예 지젝이 남기 메시지다.

분노가 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중들이 기존질서에 타협한 탓에 분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지금 우리사회의 상황과 너무도 맞닿아 있어 더욱 더 고민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지점을 고민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난 19일과 26일 집회가 진행되었던 광화문 인근 시청지하 시민청(19일)과 서울광장(26일)에서는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와글와글 시민평의회"가 진행되었다.

시민들은 이미 "이게 나라냐?"고 탄식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지만 각계각층 시민의 요구를 온전히 실현할 참된 정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거리의 정치와 의사당의 정치를 나누고 구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퇴진행동의 시민평의회팀은 진정한 해법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정치를 시급히 복원해야만 마련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룰을 정하고 시민평의회를 마련한 것이다.

- 남녀노소 누구나, 예비대선후보에서 초등학생까지 공평하게 발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 누구나 비난받지 않고 안전하게 발언할 권리를 누릴 것입니다.
- 누구의 의견이든 소중히 기록될 것입니다.
- 진행자들은 제안사항이 수렴되도록 노력하되, 어거지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해진 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회를 거듭하며 토론의 장을 열 것입니다.

시민평의회 결과를 분석한 결과(1차)는 다음과 같다.

■ 시민이 제안하는 집회문화

- 1. 다양한 구성원이 주도하는 시민중심적 집회 만들기 31%
- 2. 평화-폭력의 이분법을 넘어서 다양한 집회 방식 포용하기 18%
- 3. 다양한 문화적 실험이 공존하는 집회 공간 마련하기 16%

■ 시민운동방향

- 1. 시민평의회 같은 (시민토론회 등) 지속적인 시민 모임이 필요(온라인 플랫폼, 전국적, 소그룹) 24%
- 2. 지역(골목)과 일상으로 시민촛불과 의사표현 확산 17%
- 3. 집회를 넘어 시민불복종 운동(총파업, 동맹휴학, 세금납부거부) 17%

■ 우리는 왜 화가 났는가? (사회적 의제 발굴)

- 1.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재점검 52%
- 2. 권력자와 측근만 배부른 대한민국 17%
- 3.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절망 13%시민운동방향

퇴진행동의 시민평의회팀은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각 지역과 부문으로까지 확산하여 집회 너머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력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를 실험하는 장을 마찬가지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하여 수렴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리더쉽을 형성하고 시민권력의 현재적 실현의 상을 그리는 일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고민할 것이다. 2016의 촛불은 지제의 지적처럼 그 다음날을 상상할 겨를도 없이 이미 켜져 버렸다. 아니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제 우리는 2016 분노한 광장의 촛불을 사회변화의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그야말로 작동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만일 이번에도 87년의 실수를 반복한다면 우린 아마도 더 어두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더 이상 시민주권을 권력 뒤의 숨겨진 세력에게 강탈당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한다.

2016년 촛불의 시대정신과 정치의 과제 연속토론회(1회)

• 발표문 •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1) 들어가는 말

한국 민주주의운동에서 촛불의 등장과 그 의미

- 촛불 이전의 민주항쟁

- 1960년 4.19혁명 5.16 쿠데타로 좌절
- 1970년대 유신과 반독재 민주화 운동
- 1980년 서울의 봄 5.17 신군부의 쿠데타와 5.18 광주의 아픔과 좌절
- 1987년 6월 항쟁 직선제 쟁취의 성과와 87년 체제에서 노태우 당선 의 한계

- 촛불 이후 민주주의 운동

-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촛불 미군에 의한 무고한 희생에 대한 대중적 분노
- 2004년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한 세력에 분노
-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국민 속이고 위험한 쇠고기 수 입한 정부에 대한 분노
- 2014년 세월호 촛불 억울한 죽음과 이를 방치한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막무가 내로 버티는 정권에 대한 범 국민적 분노

2) 2016년 11월 촛불의 특징

-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
- 엄청난 대중의 결집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축제로 승화
- 시민사회 등에서 조직적으로 이끌었다기보다 자발적, 능동적, 창조적으로 발전하는 촛불
- 지역, 계층, 세대, 이념을 뛰어 넘는 국민통합의 촛불
-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살아있는 거대한 민주주의 체험 학습장으로서의 촛불

3) 1016년 촛불의 성과

- 광장에서 국민의 힘이 한 곳으로 결집되면 최고 권력자, 정치권, 재벌, 언론 등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다. (대중적 자신감)
- 광장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일 뿐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다. (국민 주권에 대한 자각과 책임감)
-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중일수록 창조적이고 능동적이며 이들이 앞장을 서는 것이 전체 국민에게 강한 결속력을 부여한다. (결집한 국민에 대한 신뢰감과 공동체 의식)

4) 2016 촛불에서 제기된 과제

-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 과제
- 집권당으로서 공동책임을 져야할 새누리당의 해체
- 실질적인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재벌에 대한 책임 추궁
- 탐욕적인 권력에 기생하여 자리보전에만 급급했던 관료들에 대한 책임 추궁
- 박근혜 정권에 부역해온 지식인(역사 교과서 집필진,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개발 옹호론을 편 교수들 등등), 문화 예술인, 언론인 등에 대한 응분의 책임 추궁

5) 2016 촛불의 교훈

-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과제와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을 것
- 대통령이 잘못하거나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모든 선출직에 대한 국민 소환제 도입 검토.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 자체를 줄이는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내각제 도입.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제왕적 총리 등장 가능성 우려

- 작동하지 않는 견제 시스템(국회, 사법부 등), 감시 시스템(국회, 감사원 등)을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대통령, 검찰, 재벌, 언론이 민주공화국을 타락시키는 주범.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가 행정, 입법, 사법 속에 구현되어야 할 것.

검찰총장, 경찰청장, 헌법재판소, 선관위원 등 선출직으로 바꿔 유권자에게 복무하도록 해야할 것임.

직접 선출이 어려운 고위 공직들의 경우 의회 통제권을 강화할 것.

다양한 지방권력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도 중앙 집중형 권력의 비대와 타락을 막는 요소가 될 것임.

- 정당이 국민과 유리되어 공천권을 행사하는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리는 등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수적.
- 무엇보다 광장에서 결집된 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야당들의 경우 촛불 시민들 중 야당의 당원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시민 속에 뿌리 내리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

다양한 풀뿌리 조직을 강화하여 지자체 등에서 일상적인 광장을 열어서 민주주의 훈련을 지속해야 할 것

직장, 학교, 마을 등에서도 학습과 토론이 가능한 조직을 건설해야 할 것.

6) 글을 마치면서

대통령의 3차 담화와 대응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진영의 의도

- 눈앞에 다가온 국회 탄핵 통과를 교란시키려는 것
- 야권을 국회 내부 논의에 묶어 둠으로서 촛불과 분리하려는 것
- 새누리당 내부 친박 진영이 개헌 국면에서 다시 전면에 서려는 의도
- 이를 위해 새누리당 친박은 비박을 설득하여 탄핵 대열에 서지 못하게 막고 국회 탄핵 통과를 저지하여 시간을 벌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것임.

야권의 대응

- 대통령과 친박의 노림수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촛불민심과의 결합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임
- 예정된 일정에 따라 탄핵안 처리에 매진하고 새누리당 비박진영의 태도를 보아야 할 것임
 - 비박이 탄핵에 가세하여 통과되면 대통령과 친박의 의도는 분쇄되는 것임.
 - 반대로 비박이 친박과 함께 탄핵에 반대한다면 새누리당 전체가 촛불민심의 표적이 될 것임.
- 탄핵안을 연기할 경우에도 야3당 공조를 허물지 않아야 할 것이고, 새누리당과 협상에 들어간다면 광장의 촛불의 표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현 시점에서는 탄핵이 만에 하나 부결이 되더라도 촛불민심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정도일 것임.

대통령 탄핵 이후 헌재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정당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촛불에서 나타난 다양한 국민들의 사회개혁을 위한 제언들을 정리해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사항과 개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야 할 것.

○ 대선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당은 촛불을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다시 수동적인 구경꾼의 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공화국의 뿌리가 약한 것은 공화국을 배반했던 세력에 대한 가차 없는 응징으로 공화국의 가치를 지킨 경험이 없기 때문.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이에 부역했던 세력에 대한 단죄를 통해 공화국 정신을 확립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스스로 발현된 촛불의 힘을 더욱 발전시켜 공화국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적 관심에 대한 지속적 촉구, 시민 교육의 활성화, 시민 문화의 풍요화가 필요.

이러한 제도와 문화가 깊이 자리 잡지 못하면 자칫 안병진 교수의 지적처럼 '부자 민중 선동가'에 의한 집권(한국판 트럼프 현상)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임.

대불어진수당 시크탱크 민주연구원